

## 돼지고기 수입정책 이대로 좋은가?



최 상 백  
(본회 부회장)

지난해 우리 양돈가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불안속에서 한해를 보냈다. 아직도 이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 각국의 무역마찰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협상이 타결되어 어떤 형태로든 농축산물 수입이 개방되리라고 본다. 수입이 개방되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좌우되던 돼지고기 가격이 국제시세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일본처럼 부족되는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국내 가격을 안정시켜 가는 수입국이 되느냐 아니면 대만처럼 양돈산업을 보호·육성시켜 생산량의 30% 가량을 수출하면서 국내 가격을 안정시켜 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축산업중 양돈업이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는 전략 작목으로 지목하여 보호육성을 희망하는 장래성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지만, 양돈인들은 축산폐수, 인력확보문제, 인건비 상승, 축산장래의 불투명 등으로 고민하며 축산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돼지 시세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사육농가수가 감소하고 두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겠다. 정부에서는 농가로 하여금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여 자신감을 갖고 시설을 확충하고 사육을 늘려서 장기적인 양돈발전이 되도록 선도해 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당면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 수입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대만형 양돈산업을 포기하고 일본형 양돈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물가안정의 긴박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

지난 1~2월의 소비자 물가가 3.5%나 상승하여 80년 이후 11년만에 최고의 급등세라고 하니 모두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요인이 결코 축산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폭발적으로 상승한 인건비, 각종 서비스요금 인상, 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그동안 여러가지 원가 변동요인이 있었음에도 제때 제때 반영하지 않고 수년째 묶어 두었다가 지난 연말부터 한꺼번에 올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물가정책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금년들어 목욕료가 30.7%, 숙박료가 29.3%, 학원비가 11.4%, 냉면값이 11.8%나 올랐다고 한다. 이처럼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서 가장 어려운 여건속에서 남들이 모두 기피하는 농촌에서 피땀으로 생산한 농축산물 가격에 화살을 돌려놓고 수입을 쉽게 결정한다는 것은 농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우리 양돈인들은 그동안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의 불안으로 축산을 계속할 것인가를 망설이느라 두수를 들리지 못했지만 가격안정을 위한 출하조절에 협조해 왔고, 점차 모돈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7-8월 이후가 되면 생산이 크게 증가하여 가격이 대폭 하락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연구기관과 인력을 지금의 2,3배로 늘리고 행정조직도 과감히  
 개편하여 식생활 및 농촌소득을 주도해 가게될 축산전문직이  
 국장, 차관까지는 보직이 되어야 더욱 책임성 있는  
 정책개발이 될 것이며 물가안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축산국이  
 될 것이다.

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우유문제와 같이 생산을 줄이기 위해 저능력 젖소를 도태하도록 권장했다가 불과 몇개월도 못되어 우유가 부족하여 분유를 수입하므로서 낙농인의 분노를 사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갖게하는 시행착오가 또다시 발생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 몇가지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양돈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경영규모를 전업화하고, 배합사료 등 축산생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적용 세법개정이 조속히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사 이전 또는 증개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 기반조성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대비한 시설자동화 등 시설개선에 더욱 과감한 투융자가 되어야 하겠다.

둘째,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각급 도축장을 통폐합하여 도축, 가공 판매를 겸한 종합유통시설로 현대화 하고 생육중심의 식육거래를 포장육으로 개선되도록 포장방법을 진공포장으로 고급화하여 유통과정에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기호도를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다. 또한 축산물 가공시설을 증설하여 생육 위주의 소비패턴을 가공육 소비확대로 소비구조를 다양화 하고, 생산 불균형에 의한 가격 등락폭을 좁혀 나가야 하겠으며 중간상인들이 가격조작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축협 등 단체로 하여금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대폭 증설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 요즘 물가문제로 불안이 대단한데도 피부로 느끼는 물가와 정부발표 물가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는 물가지수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혀 저장성이 없고 가격 조절력이 없는 채소와 육류를 물가지수 품목에 포함하는 것 때문이다. 생산자는 가격 폭락으로 수확마저 포기하는 상태에 있었으면서 물가안정에 공을 세우는가 하면, 흥작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아우성인데도 물가상승의 주범이 되는 모순이 없어야 되겠다.

넷째, 우리나라 GNP중 농림수산 비중이 '70년의 25.8%에서 '80년에 10.2%로 감소하였지만 농가소득중 축산수입 비중이 '70년도 5.6%에서 '89년도에는 17.8%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개방이 확대될 수록 더욱 증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조직이나 정책, 지원비율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의 축산시험장, 국립축육원, 도단위 중축장, 위생시험소 등의 기능을 갖고는 국제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연구기관과 인력을 지금의 2, 3배로 늘리고 행정조직도 과감히 개편하여 식생활 및 농촌소득을 주도해 가게될 축산전문직이 국장, 차관보까지는 보직이 되어야 더욱 책임성 있는 정책개발이 될 것이며 물가안정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축산국이 될 것이다. 